



2016년 통일·북한 연구 최종보고서

# 북한사회 계급 연구: 이론, 역사, 현황

김진환 (통일교육원)



# 북한사회 계급 연구: 이론, 역사, 현황

김진환(통일교육원)

## 목 차

- |                                |                    |
|--------------------------------|--------------------|
| I. 머리말 : 북한 계급 연구의<br>유용성과 필요성 | III. 계급으로 본 북한 역사  |
| II.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 : 비판적<br>고찰    | IV. 북한의 시장화와 계급 변화 |
|                                | V. 맺음말             |

[국문요약] \*조선노동당은 착취계급이 사라진 북한에서 혁명적·선진적인 노동계급이 소자산가 의식이 강한 농민, 자유부동하는 인텔리를 잘 지도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집단주의적으로 개조해가다보면, 그리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국가적) 소유로 바꿔내면 마침내 계급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인민대중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착취계급으로 군림해왔고,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혁명적·선진적 노동계급이라는 신화는 무너진 채 군인이 노동계급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식량의 은닉과 밀매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농민 혁명화에도 완전히 실패했다. 조선노동당 계급이론과 실제 북한 계급구조·계급의식의 괴리는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

다. 무엇보다, 관료, 노동계급, 농민이라는 3대 계급 사이에서 소고용주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함으로써 자본가계급 소멸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또한 관료와 소고용주가 후견-피후견 관계를 맺으면서 관료의 착취계급적 속성이 더 강해지고 있고, 시장화 진전, 조선노동당 농업개혁 등의 영향으로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은 갈수록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계급 연구는 첫째, 북한사회의 총체적·포괄적 이해를 돕고, 둘째, 좀 더 보편적 견지에서 북한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셋째, 북한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좀 더 과학적·객관적 대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일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자본가계급, 노동계급, 관료, 농민, 소고용주, 소자산가 의식

## I. 머리말 : 북한 계급 연구의 유용성과 필요성

계급은, 어떤 사람들이 (이어받은 것이건 또는 함께 나누어가진 것이건) 공통된 경험의 결과 자신들 사이에는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다른(대개 상반되는) 타인들과 대립되는 동일한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나타난다.<sup>1)</sup>

대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탓에 안을 정확히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창문은 여러 개 있는 집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이 집이 북한이라면, 계급(class)은 좀처럼 자기 모습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는 ‘미지의 사회’ 북한<sup>2)</sup>을 들여다보는, 더 정확히 말해 그것을 통해 북한을 들여다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여러 창문 중 하나다. 특히 계급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평가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사회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개념이다. 최근까지도 북한 밖 사람들이 북한을 들여다볼 때 주로 이용한 창문 또는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주로 활용한 개념은 대부분 정치구조, 경제구조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유격대국가(partisan state), 가족국가, 극장국가 같은 개념은 북한 정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sup>3)</sup> 경제개혁(reform)은 오늘날 북한 경제구조의 변화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이다.

〈그림 1〉 북한사회 비유 : ‘창문이 있는 집’과 ‘빙산’



- 1) E. P 톰슨 지음, 나종일 외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0), p. 7.
- 2) 흔히 북한은 조선노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지배집단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라고 말할 때 북한은 지배집단의 동의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북한을 휴전선 이북에 존재하는 사회체제(사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할 것이다. 곧 북한과 북한사회는 동의어다. 북한사회의 지배집단을 가리킬 때는 조선노동당은 조선노동당 또는 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 당국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다.
- 3) 북한 정치 설명을 위해 나온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글과 책을 참조.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서울: 한울, 2001), pp. 11~42;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서울: 창비, 2013), pp. 30~98.

그런데, 북한을 빙산에 비유해보면, 다양한 국가 개념, 경제개혁 개념 등을 통한 북한 이해는 빙산의 수면 윗부분 정도를 이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겨진 북한 이해의 핵심 과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북한, 곧 빙산의 수면 아랫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북한이라는 빙산이 결국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빙산은 주로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주체들(지배집단)과 주로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주체들(피지배집단)이 조화를 이루며 어느 쪽으로든 유유히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극심한 갈등 탓에 빙산이 깨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계급 연구가 필수적이다. 애당초 계급은 사회구성원이 맺고 있는 '관계'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관계가 사회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부' 권력자끼리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는 현재 북한 정치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여러 개념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북한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구성원끼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계급이라는 창을 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그동안 사회학적 개념을 통한 북한 이해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대표적인 게 '계층(stratum)' 개념을 활용한 북한 이해다. 계층은 북한의 '불평등(inequality)', 사회적 지위 이동의 폐쇄성 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sup>4)</sup> 하지만, 계층을 통한 북한 이해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첫째, 계층은 재산, 소득, 학력, 직업, 생활양식 같은 임의적 기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범주(category)다.<sup>5)</sup> 따라서 계층 연구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센서스(census)를 전제로 하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구센서스조차 1993년, 2008년 두 차례 밖에 실시하지 못했고, 인구센서스 말고는 계층 연구에 활용할만한 통계를 거의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성분을 기준으로 정치적으로 나누어놓았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계층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불평등도 고착됐다는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sup>6)</sup>

둘째, 계층은 정적(靜的)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의 원인이나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달리 말하면, 계층을 통해 재산 또는 소득 재분배, 학력 평준화, 직업 선호 변화 같은 사회변화의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에 반해 계급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충돌, 집합행동 등을 전제로 하는 동적(動的)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요컨대, 계급 개념은 상세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북한사회 변화의 결과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까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변화 때문에 북한 계급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사회에서 '새로운 계급(new class)'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급의 등장은 북한 밖 관찰자들에게 크게

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pp. 287~292.

5)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p. 411.

6) 통일부,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4), pp. 326~32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pp. 287~292.

두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데, 하나는 2장에서 소개할 북한 당·국가의 오랜 계급 개념과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조건과 이유 때문에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새로운 계급이 북한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예측해보는 것이다.

더불어 통일교육이 북한사회에 대한 부분적·단편적 지식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시키는 수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도 북한 계급 연구는 필수적이다. 흔히 ‘사회’를 정치, 경제 이외의 ‘어떤 것’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시각은 사회란 서로 교류하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학문적 정의와는<sup>7)</sup> 조금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사회란 권력(power)을 둘러싼 정치적 관계, 재화(goods)를 둘러싼 경제적 관계 등 사회구성원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가는 “사회를 각 부분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연구한다면 그 조건에 있어서나 그 운동에 있어서 사회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이루어질 수 없다”<sup>8)</sup>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해 교육<sup>9)</sup>은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부분에 관한 지식은 충실히 전달하고 있지만, 각 부분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북한 ‘사회’를 구성하고, 바꾸어가고 있는지를 이해시키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장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겠지만, 계급은 북한 당·국가가 정의하듯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 곧 경제적 관계만을 반영한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를 포함해 서로 영향을 끼치는 사회안의 모든 관계가 반영된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사회 계급 연구는 곧 북한사회 연구라고 말할 수 있고, 북한사회의 작동원리와 변화양상 등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지향한다면, 반드시 계급이라는 창을 통해 북한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크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것이다. 첫째,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은 무엇인가? 둘째,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은 얼마나 북한사회의 실제와 부합하는가? 셋째, 오늘날 북한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계급은 무엇이고, 새로운 계급의 출현은 북한의 미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넷째, 북한 계급 연구는 통일교육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정리하면, 이 연구의 목적은 계급이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북한의 미래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전망해보며,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통일교육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 II.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 : 비판적 고찰

이데올로기(ideology)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 이론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모든 이데올로기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직은 이루지 못했지만 도달

7)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pp. 24~25.

8) 루이스 A. 코저 지음, 신용하·박명규 옮김, 『사회사상사』 (서울: 일지사, 1978), p. 23.

9) 현재 통일교육원, 각 급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크게 보면 통일 상대방인 북한 이해, 통일필요성과 통일비전 이해, 한반도 주변 정세와 통일 환경 이해, 통일방안과 통일정책 이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고 싶어 하는 지향점이 담겨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와 사회 실체가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사회의 지배집단은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이데올로기(지배이데올로기)와 피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피지배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 동일화’를 추구한다. ‘강압’과 ‘동의’라는 지배의 두 가지 형태 중에, 동의에 의한 지배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sup>10)</sup>를 수단으로 이데올로기 동일화를 추구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뜻이다.<sup>11)</sup>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도 전형적인 지배이데올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에는 북한 지배집단인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지향과 이해 등이 담겨 있고, 둘째,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이 북한사회의 실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노동당 계급이론과 북한사회 실체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조선노동당 계급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조선노동당 계급이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먼저, 조선노동당의 계급 정의와 계급구조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조선노동당은 계급을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사회경제생활에서의 지위와 역할,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회적집단”으로 정의한다.<sup>12)</sup>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 사회의 기본 계급이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으로 바뀌었고, 두 계급의 관계 또한 자본주의 사회까지 이어졌던 착취-피착취관계에서 친선관계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계급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요인에 의하여 갈라지지만 거기에서 규정적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이다. (...) 자본주의사회에서 기본계급은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이며 농민을 비롯한 소자산계급과 지주계급은 비기본계급이다. 로동계급은 그 사회경제적처지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으로 된다. (...) 계급은 일정한 역사적단계의 필연적산물인것만큼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면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 청산된다. 그러나 친선적인 두 기본계급인 로동계급과 농민은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인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존재와 관련된다.<sup>13)</sup>

이러한 조선노동당의 주장은 독창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이원적 계급 모델(two-class model)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사회구성원이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뉜다고 봤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분리는 역사적 단계마다 달랐는데, 고대에는 주인과 노예, 봉건시대에는 농노와 영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서로 투쟁하는 두 계급이

10) 알튀세르는 국가기구를 경찰, 군대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와 학교, 교회, 언론, 대중매체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구분한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피지배집단에게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11) 김진환,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내면화,” 강정구 외,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서울: 선인, 2009), p. 395.

12)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19.

13)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pp. 319~320.

었다.<sup>14)</sup> 단,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계급이 노동계급과 농민이라는 주장은 마르크스의 것이 아니라 소련공산당의 것이다.

한편, 조선노동당은 계층 개념을 임의적 기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범주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물질적부의 생산에서 독자적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조선노동당은 인텔리(지식인)를 대표적 계층으로 규정하면서,<sup>15)</sup> 인텔리를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만들기 위한 “인테리 혁명화”를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제기한다.

인테리. 주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식인이라고도 한다. 인테리는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생산로동에서 정신로동이 떨어져나와 사회관리, 로동관리, 과학, 예술과 같은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생겨났다. 인테리는 계급으로 되지 못하지만 일정한 계급과 연결되어있는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 착취계급에게 복무할뿐아니라 로동계급에게도 복무할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있다.<sup>16)</sup>

인테리를 혁명화한다는것은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소부르조아사상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진정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열렬한 혁명투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을 의미합니다. 인테리를 혁명화하는 문제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과업입니다. 이 과업은 전 사회를 로동계급화하고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입니다.<sup>17)</sup>

앞에서 소개했듯이 조선노동당은 계급을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기반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당면해서는 농민을 인텔리와 마찬가지로 혁명화하고, 궁극적으로 소유관계가 일원화되면 계급도 사라진다고 본다. 조선노동당에 따르면 계급 철폐는 공산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도기’인 사회주의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근성을 없애고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sup>18)</sup>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14) 에드워드 G. 그래프 지음, 양춘·김원동 옮김, 『사회불평등론: 고전 및 현대이론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89), pp. 21~22.

15)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용어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132.

16)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용어사전』, p. 561.

17)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5.7. 1),” 『김일성 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92~393.

18)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한 테제(1964.2. 25),”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638.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발전시킴으로써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계급적차이와 계급이 없어지면 과도기의 임무는 완수되게 된다.<sup>19)</sup>

끝으로 조선노동당은 친선계급만 존재하는 사회주의 사회에도 ‘계급투쟁’은 존재하는데, 이전 사회에서 벌어졌던 계급투쟁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곧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투쟁은 계급끼리의 투쟁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로동계급, 농민, 인텔리) 내부의 투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쟁이 아니라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투쟁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이 있고 근로자들의 머릿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것과 관련하여 로동계급은 계급투쟁을 계속한다. (...)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은 종래의 계급투쟁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가는 근로자들의 내부분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투쟁을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 할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데로 진행하여야 한다.<sup>20)</sup>

정리하면,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은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 구분, 사회주의 혁명에 따른 착취계급 소멸론, 노동계급과 인텔리의 연대 추구, 생산수단 소유관계 일원화에 따른 계급소멸론,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계급투쟁론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 등 선행 사회주의 정당들의 계급이론과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소련공산당도 아래 인용문처럼 ‘2개의 친선계급과 1개의 계층’론을 주장했고,<sup>21)</sup> 평화적 방법에 의한 계급투쟁론은 중국공산당의 문헌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사회주의 경제가 건설됨에 따라 사회 계급구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혁명과정에서 지주 기타 대토지소유자, 도시의 자본가인 실업가·은행가·상인, 농촌의 자본가인 부농 등 모든 착취자계급이 일소된다.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계급과 농민이라는 2개의 우호적인 근로계급과 또 근로인텔리겐차로 이루어진다(소련과학아카데미 경제학연구소).<sup>22)</sup>

19)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p. 320.

20)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p. 321.

21) 김귀옥·김재윤, “변혁기 북한의 계급과 계급정책,” 김재윤·장경섭 편,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 201.

22) 극동문제연구소 편, 『원전 공산주의대계: 이론과 비판 (상)』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4), p. 2010.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제면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성취되고 혁명시기의 대규모의 폭풍우와 같은 대중적 계급투쟁은 기본적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전복된 지주·매판계급의 잔존분자와 부르주아지도 아직 존재하며 소부르조아지는 겨우 개조되기 시작했다. 계급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중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느냐 하는 이데올로기면에서의 투쟁은 아직도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 사상투쟁은 다른 투쟁과 달라서 거칠고 강제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며 섬세하고 도리로 설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모택동)<sup>23)</sup>

이처럼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도 사회주의 정당 계급이론의 보편적 맥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 역시 사회주의 정당 계급이론이 받았던 이론적·경험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첫째, 생산수단 소유 여부로 계급이 구분된다는 사회주의 정당들의 주장은 일찍부터 사회구성원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곧 사회주의 사회에도 노동계급, 농민 말고도 다양한 계급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베버의 계급이론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로부터 나온 비판이다. 베버는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자본재로 전환될 수 있는 재산의 소유 여부가 계급위치를 결정짓는 기본 요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행위자들의 ‘소유’ 종류에 따라 계급을 좀 더 세분화했다. 그는 계급을 시장에서 공통된 “상황”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 비슷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생활기회”를 갖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한 뒤, 재산의 종류 또는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유산자와 무산자를 다시 여러 계급으로 나누었다(〈표 1〉).<sup>24)</sup>

〈표 1〉 마르크스와 베버의 계급 분류 비교

마르크스의 분류	베버의 분류
1. 부르주아지(자본가계급) 2. 프티부르주아지(소자본가계급) 3. 프롤레타리아(노동자계급)	1. 유산자 1) 기업가 2) 금리생활자 2. 무산자 1) 중간계급 2) 숙련노동자 3) 반숙련노동자 4) 비숙련노동자

※ 출처 :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p. 409. 〈표 10-1〉.

23) 극동문제연구소 편, 『원전 공산주의대계: 이론과 비판(상)』, p. 2012.

24)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pp. 407~408; 에드워드 G. 그랩 지음, 양춘·김원동 옮김, 『사회불평등론: 고전 및 현대이론가』, pp. 65~66.

〈표 2〉 에릭 올린 라이트의 계급 유형

	생산수단 자산				
	소유자	비소유자(임금노동자)			
노동자를 고용할 충분한 자본을 소유하고 일하지 않음	1. 부르주아지	4. 전문인경영자	7. 반전문자격 경영자	10. 비전문자격 경영자	+
노동자를 고용할 충분한 자본을 소유하나 일할 수도 있음	2. 소고용주	5. 전문인감독자	8. 반전문자격 감독자	11. 비전문자격 감독자	>0 조직 자산
스스로 일하는 데 충분한 자본을 소유하나 노동자를 고용할 만큼 충분치 못함	3. 프티부르주아지	6. 전문인 비경영자	9. 반전문자격 노동자	12. 프롤레타리아	-
		+	>0	-	기술/자격 자산

※ 출처 : 스테판 에젤 지음, 신형철 옮김, 『계급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 46.

하지만 이러한 계급정의는 극단적인 경우 거의 모든 개인을 하나의 계급으로 구분하게 되어 계급개념을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sup>25)</sup>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는 착취의 토대인 ‘생산수단 자산(assets in the means of production)’, ‘조직 자산(organization assets)’, ‘기술 자산(skill assets)’ 소유 여부에 따라 개인의 계급위치(class location)가 정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면서 현대사회의 복잡성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표 2〉). 특히 라이트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토대로 한 착취는 사라졌지만, ‘조직 자산’ 통제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화됐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라이트는 조직 자산을 독점한 ‘관료(bureaucrats)’를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계급으로 규정하고, 기술 자산을 가진 인텔리는 모순적 계급 위치<sup>26)</sup>에 있는 집단으로 바라봤다(〈표 3〉).<sup>27)</sup>

25) 에드워드 G. 그래프 지음, 양춘·김원동 옮김, 『사회불평등론: 고전 및 현대이론가』, p. 66.

26) ‘모순적 위치’ 또는 ‘모순적 계급위치’는 라이트가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닌 피고용인(예를 들면 경영인, 감독자 등)의 계급적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라이트는 초기에 생산수단을 법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타인 또는 자신의 노동력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모순적 계급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다가, 후기에는 노동자율성 대신 조직 자산, 기술 자산 등의 소유를 모순적 계급집단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로즈메리 크롬프톤 지음, 정태환·한상근 옮김, 『현대의 계급론』(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pp. 97~103.

27) Erik Olin Wright, “A Gener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lass Structure,” in Erik Olin Wright and others, *The Debate on Classes* (London·New York: Verso, 1989).

〈표 3〉 생산양식별 기본계급과 주요 모순적 위치

생산양식	기본계급	주요 모순적 위치
봉건제	영주와 농노	부르주아
자본주의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	경영자/관료
국가관료사회주의	관료와 노동자	인텔리/전문가

※ 출처 : Erik Olin Wright, "A Gener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lass Structure," in Erik Olin Wright and others, *The Debate on Classes* (London·New York: Verso, 1989), p. 26. Table 3.

둘째, 사회주의 사회에서 착취계급이 소멸됐다는 주장,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주장 등은 라이트 이전부터 많은 이론가들이 비판해왔던 단골 메뉴다. 비판의 핵심은 당·국가 관료가 하나의 계급으로 존재하면서, 과거 자본가가 했던 착취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탈린에 의해 러시아 밖으로 추방된 이후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에게 죽임을 당한 트로츠키는 일찍이 1930년대 중반에 소련 관료집단을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규정하며 그들의 행태를 아래처럼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련의 정치서적들을 보면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사업방식을 “관료주의”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비난은 항상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며 상부의 자기방어용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관료집단을 지배층으로 보면서 연구한 내용은 어디에도 볼 수 없다. 이 지배층의 숫자, 체계, 실제 인물, 특권과 취향, 국민총생산량에서 어느 정도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의 데이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관료집단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지배“계급”의 구체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자신들이 장악한 통치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증명한다. (...) 여러 개의 방, 충분한 식량, 단정한 의복이 아직도 인구의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상황에서 고위이든 하위이든 수백만의 관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주로 자신의 복지를 확보하는데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이 집단의 지독한 이기주의, 공고한 내부 단합, 대중의 불만에 대한 두려움, 모든 비판을 압살하고자 하는 끈질긴 집착, “지도자 동지”에 대한 위선적 이면서도 종교의식에 가까운 복종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도자 동지”는 이 새로운 지배 집단의 권한과 특권을 확립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받고 있다.<sup>28)</sup>

트로츠키 이후 사회주의 사회 관료에 대한 대표적 비판은 1950년대 중반 질라스와 마르쿠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질라스는 생산수단 소유라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기준에 따라 소련의 관료를 신계급(New class)으로 규정했다.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 관료는 생산수단을 개별적인 사적 소유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9)</sup> 이에 비해 마르쿠제는 계급을 생산수단 소유 여부가 아닌 “사회적 분업에서 ‘분화된’ 기능으로서 행정기능을 행사하는 어떤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sup>30)</sup> 소비에트 관료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28) 레온 트로츠키 지음, 김성훈 옮김, 『배반당한 혁명』 (서울: 갈무리, 1995), pp. 157~160.

29) 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통일문제연구』, 제51호 (2009), p. 372.

생각과 달리 “중앙집중화된 권위주의적 조직”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를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제와 라이트의 주장이 시간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맥락에 있는 셈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치 권력은 ‘단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된 힘’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체와 객체의 계급적 동일성은 이제 강제를 합리적 관리로 변형시키는 경향을 띤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바로 이러한 변형으로서 국가의 기능상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그 공적 기능은 그 정치적 특성을 상실할 것이고, 사회의 참된 이해 관계를 감시하는 단순한 관리 기능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달리 소비에트 국가는 모든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에 대립되는 오로지 정치적인 기능과 통치 기능을 행사한다. 지배는 분업에서의 전문화된 기능으로 남아 있고, 그 자체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관료주의의 독점이다. 이러한 기능은 생산과정에 대한 중앙집중화된 권위주의적 조직을 통하여 지속되고, 피지배 주민들의 집단적 통제를 받지 않는 사회의 필요(사회적 생산물과 그 분배)를 결정하는 집단에 의해 지도된다.<sup>31)</sup>

실제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 속에서 당·국가 관료는 1953년 동독 노동자 봉기의 무력 진압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때까지, 자본주의 사회 착취계급의 폭력적 행태를 시시때때로 반복했다.<sup>32)</sup> 설득 대신 강제를 통한 계급투쟁도 가능하던 중국공산당은,<sup>33)</sup> 이러한 입장을 확인시켜주겠다는 듯 1989년 6월 4일 천안문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 지식인, 노동자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sup>34)</sup>

셋째, 사회주의 정당들은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사라지면서 궁극적으로 계급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전인민적 소유 개념이다. 아래 인용문처럼 사회주의 정당들은 전인민적 소유와 국가소유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두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즉 (1) 국가적·전인민적 소유형태, (2) 협동조합적·콜호즈적 소유형태가 그것이다. 국가적·사회주의적 소유라 함은 사회주의 국가에 의하여 대표

30) “의심할 여지없이 ‘계급’을 기본적인 생산 수단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라는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소비에트의 관료는 계급이 ‘아니’다. 만약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가 그 기준이 된다면, 그러한 통제가 ‘직접 생산자들’에 의해 위임되고, 그런 다음 효과적으로 통제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물음이 결정적일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계급’이라는 말을 특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분업에서 ‘분화된’ 기능으로서 행정(관리 기능을 포함하는)기능을 행사하는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H. 마르크제 지음, 문현병 옮김,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분석』 (서울: 동녘, 2000), pp. 108~109.

31) H. 마르크제 지음, 문현병 옮김,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분석』, p. 108.

32) 동유럽과 소련에서 발생했던 노동자와 국가 간 투쟁은 아래 책 참조. 크리스 하먼 지음, 김형주 옮김,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1945~1983』 (서울: 갈무리, 1994).

33)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될 때까지 계급투쟁은 역시 계속 존재한다. 사회주의 개조가 완성된 이후에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입장·견해·방법사이의 투쟁은 역시 매우 오래 동안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이 투쟁을 실시하는 주요방법은 설득·교육인데 다만 사회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더구나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는 일부분자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강제적 개조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유소기).” 극동문제연구소 편, 『원전 공산주의대계: 이론과 비판(상)』, p. 2013.

34)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 2』 (서울: 이산, 1999), pp. 338~349.

되는 전인민의 소유이다. (...) 노동자계급이 국가적·사회주의적 소유(전인민적 재산)로 되어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대하여, 콜호즈 농민은 각자의 콜호즈·협동조합단체의 협동조합적·콜호즈적 소유로 되어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소련과학아카데미 경제학연구소).<sup>35)</sup>

전인민적 소유.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소유. (...) 전인민적소유에서의 생산물은 국가소유로서 국가의 관할밑에 처리되며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된다. (...) 전인민적소유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될 공산주의사회에가서도 유일하게 남아있게 될 소유형태이다.<sup>36)</sup>

따라서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면 계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계급이 노동계급과 농민에서 라이트가 말한 대로 당·국가의 ‘관료’와 협동적으로도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로 바뀔 뿐이다. 실제로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급격한 전환은 노동계급과 농민에게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sup>37)</sup> 한마디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계급소멸론은 당·국가 관료의 지배계급성을 은폐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사회주의 정당은 인텔리를 ‘노동계급의 인텔리’, 곧 노동계급을 위해 복무하는 인텔리로 만드는 것을 공식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만하임이 말했듯 ‘자유부동(自由浮動)’, 주요 계급들과의 느슨한 관계 등이 인텔리의 속성이라면,<sup>38)</sup>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의 인텔리 역시 노동계급이나 관료(국가계급)<sup>39)</sup>에게 모두 복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 속에서 사회주의 정당은 인텔리에게 일관되게 ‘조건부’ 또는 ‘선택적’ 환호를 보냈다. 그들이 환호한 인텔리는 언제나 관료에 ‘충성하는’ 인텔리였지, 노동계급에 복무한답시고 관료에 ‘저항하는’ 인텔리가 아니었다. 아래의 인용문들에서 드러나듯이 1968년 봄 체코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의 개혁 열망을 안고 출범한 두프체크 정권이든, 그해 8월 노동자들의 개혁 요구를 소련군 탱크가 짓밟은 이후 등장한 후사크 정권이든 인텔리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혁파든 보수파든 사회주의 사회의 관료에게 인텔리는 통치를 위해 회유하든, 억압하든 관료 편으로 포섭해야 할 대상이었다.

35) 극동문제연구소 편, 『원전 공산주의대계: 이론과 비판 (상)』, pp. 1849~1850.

36)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16.

37)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중국에서는 인민공사(人民公社) 결성을 중심으로 한 대약진운동이 전개됐다. 대약진운동은 생산수단이 당·국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재편됐을 때 노동계급과 농민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1959년~1962년 사이 약 2,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1957년 17.6세에서 1963년 9.7세로 낮아졌다.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 2』, pp. 159~170.

38) 전태국, 『(개정판) 지식사회학: 지배·이데올로기·지식인』(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7), pp. 333~334; 강수택,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서울: 삼인, 2001), p. 43.

39) 장용석은 주변부 국가 관료에 대한 논의, 국가사회주의 관료에 대한 질라스의 신계급 개념, 특수한 생산양식으로서의 소비에트 유형 체제와 지배계급 개념 등을 종합해 국가사회주의 사회 관료들을 그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계급’으로 정의했다. 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p. 375.

지식인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노보트니 정권의 죄과(罪科), 즉 자유로운 토론의 탄압, 테러 행위, 경제의 비효율성, 소수 고위 공산당원의 권력독점 등을 성토했다. 하지만 그들이 대안을 논의할 때는 결코 그와 같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양극화되어 각각 관료제적 통치의 변형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더욱 근본적 변화를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 지도부는 지식인들의 불만을 인식하고서 그들과 밀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관료들의 정치·경제적 목표에 일체감을 보여준 지식인들—그리고 중간계급의 다른 성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약속되었다. (...) 그러한 약속에 솔깃해진 중간계급의 전 부문—관리 및 감독관, 전문직 노동자, 그리고 지식인들 중에서는 경제학자 등—은 당 지도부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 그들의 주요 불만의 하나는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임금차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나 서방보다 작다는 것이었다. 오직 극소수의 고위 당관료들만이 엄청나게 높은 생활수준을 누렸으며, 대부분의 중간계급은 평균보다 25~30퍼센트 높은 임금을 받을 뿐이었다.<sup>40)</sup>

두브체크는 1969년 여름까지 당 최고회의에 남아 있었다. 후사크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두브체크를 당에서 쫓아내 버릴 만큼 자신감을 얻었다. (...) 경찰력은 공공연히 반정부 행위를 중단시키고, 언론의 '체제 전복적' 견해 표현을 탄압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 모든 계층으로부터 정권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러한 지지, 특히 관리자, 계획 입안자, 하급 관리, 저널리스트, 방송인, 교사 등 중간계급의 지지는 절실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매일 매일의 착취와 교육, 관료제적 통치의 기반이 되는 물질적 재생산을 감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당 기구의 지시에 충실한 관리자, 학자, 저널리스트와 작가들에게는 그 대가로 화려한 경력과 좋은 직장 그리고 대중을 괴롭히던 물자부족으로부터의 해방과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이 약속되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들이 고위층으로부터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위를 위협받고 살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야 했다.<sup>41)</sup>

### Ⅲ. 계급으로 본 북한 역사

계급으로 북한사회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같은 사회주의 생산방식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몇몇 집단들의 관계가 조선노동당의 공식 주장과는 별개로 실제로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북한사회의 과거를 살펴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선노동당 계급이론과 북한사회 실제의 '괴리'를 찾아보겠다는 뜻이다.

조선노동당이 발간한 문헌들을<sup>42)</sup>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40) 크리스 하먼 지음, 김형주 옮김,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1945~1983』, pp. 289~290.

41) 크리스 하먼 지음, 김형주 옮김,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1945~1983』, pp. 322~323.

42) 조선노동당이 자신과 북한사회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독서는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 력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당력사연구소,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결과 착취계급으로서의 자본가계급은 사라졌고,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당·국가 관료는 과거 착취사회의 ‘관료배’<sup>43)</sup>가 아니라 ‘일군’으로서 인민을 위해 복무해왔으며, 노동계급은 선진적 의식의 소유자답게 북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도해왔고, 농민과 인텔리 혁명화도 성과를 거뒀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공식 주장은 착취계급인 자본가계급이 소멸됐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제와는 거리가 있었다.

### 1. 농업·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자본가계급 소멸

조선노동당의 주장대로 농업·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큰 장애 없이 이루어졌다.<sup>44)</sup> 먼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보자. 봉건조선에서 곧바로 식민지조선으로 직행하며 봉건사회 지배계급과 일제로부터 지속적 수탈을 당해왔던 농민들은 토지 ‘소유’에 강한 열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 조선노동당 입장에서는 당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표 4〉) 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러한 열망을 어느 정도 실현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표 4〉 주민의 사회 그루빠별 구성(%)

	1946년 말	1949년 말	1953년 12월 1일	1956년 9월 1일	1959년 12월 1일	1960년 말
총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동자	12.5	19.0	21.2	27.3	37.2	38.3
사무원	6.2	7.0	8.5	13.6	13.4	13.7
농업협동조합원	-	-	-	40.0	45.7	44.4
개인 농민	74.1	69.3	66.4	16.6	-	-
협동단체가입 수공업자	-	0.3	0.5	1.1	3.3	3.3
개인수공업자	1.5	0.8	0.6	0.3	-	-
기업가	0.2	0.1	0.1	-	-	-
상인	3.3	1.7	1.2	0.6	-	-
기타	2.2	1.8	1.5	0.5	0.4	0.3

※ 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통계집』(평양: 국립출판사, 1961), p. 19.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정영철 외, 『조선로동당의 역사학: 조선로동당사 비교연구』(서울: 선인, 2008).

43) 조선노동당이 말하는 ‘관료배’란 “착취사회에서 권력기관에 있으면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인민대중을 직접 억압착취하는자”다.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용어사전』, p. 138.

44) 이하 농업·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아래 글을 주로 참조해 수정·보완했다. 김진환,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pp. 31~34; 김진환, “북한현대사 : 자주와 자립을 향한 지난한 행로,” 강정구 외,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서울: 선인, 2009), pp. 184~186.

이에 따라 조선노동당은 1946년 3월, 모든 소작지 몰수, 농가별로 가족수(노동력)와 나이에 따른 토지 분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sup>45)</sup> 자영농을 극적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개혁을 피해 대지주, 종교집단 등이 월남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개조를 조직적으로 반대할 만한 세력도 사라졌다. 하지만 자영농 확대는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 제거에는 분명히 방해가 되는 조건이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개인이거주의 성장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토지개혁 이후 국가기구인 인민위원회와 농민은 농업현물세 징수, 양곡수매사업 과정 등에서 갈등을 빚었다.<sup>46)</sup>

조선노동당은 토지개혁 이후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을 '건국사상총동원운동' 같은 집단주의 사상교양으로<sup>47)</sup> 없애려 노력하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마침내 농업 협동화에 나섰다. 먼저, 1951년부터 전선 인근인 강원도 지역에서 집단적 노력조직인 전선공동작업대가 결성됐고, 이 중 일부는 토지까지 통합해 공동경작, 공동분배하는 협동조합 형태를 띠기도 했다. 또한 조선노동당은 1952년 12월 전쟁으로 어려워진 빈농민과 영세어민 생활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부업생산협동조합 조직을 장려·원조했고, 이 결과 1953년 7월 현재 전선공동작업대가 진화한 농업협동조합 102개, 부업생산협동조합 72개가 만들어졌다.<sup>48)</sup>

한국전쟁 시기 극심한 파괴는 전후 농업 협동화를 빠르게 추동했다. 미군 폭격으로 8,700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완전 파괴되고 농지 37만 정보가 피해를 입었다. 1949년에 비해 1953년 공업생산은 64%, 농업생산은 76% 수준으로 줄었고, 자영농의 40%가 영세농민 처지에 놓이게 됐다.<sup>49)</sup> 그러자 김일성은 1953년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영세농민들의 생활 개선 대책으로 농업 집단화 방침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우선 협동화를 적극 지지한 빈농들을 중심으로 각 군에 협동조합들을 몇 개씩 시범적으로 조직했다. 곧이어 1954년 1월에는 협동조합의 세 가지 형태, 곧 제1형태는 농촌노력협조반, 제2형태는 반(半)사회주의적 형태인 토지협동조합, 제3형태는 완전한 사회주의 형태를 제시하며 중농, 부농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했다. 특히 조선노동당은 1955년에 중농층 가입을 위해 협동조합에는 장기대부를 하고 개인농에게는 단기대부밖에 주지 않았다. 또한 세금도 협동조합에 적게 지우고, 개인농에 더 많이 지우며, 농기계도 협동조합에 공급하고 개인농은 소로 경작하게 하는 차별정책도 적극 활용했다.<sup>50)</sup>

이렇게 농업 협동화가 본격화되면서 '당연히' 농민의 저항도 있었는데, 적극적 방식보다

45)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151~205.

46)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pp. 293~304; 김성보, "해방 초기 북한에서의 양곡유통정책과 농민," 『동방학지』, 77~79 합집호 (1993).

47) 김재용,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현실』, 제56호 (2005).

4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p. 463~464.

49) 고승효 지음, 이태섭 옮김, 『현대북한경제입문』 (서울: 대동, 1993), pp. 111~112;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255.

5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pp. 658~690;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258.

는 소극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가입 전에 가축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토지 일부를 텃밭으로 떼어놓아 따로 경작하는 일이 빈번했다. 텃밭 일 때문에 조합에 결석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조합원들이 수확물 분배 이후 조합을 탈퇴해버리기도 했다. 이른바 ‘배천 바람’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쟁 전 38선 이남에 속했다가 전후 북한으로 편입된 ‘신해방지구’인 황해남도 배천에서는 1956년 결산 분배가 끝나자마자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농민들 다수가 탈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여파로 당시 황해남도 당 위원장이었던 고봉기가 숙청을 당했다.<sup>51)</sup> 같은 신해방지구인 황해남도 개성시 등에서도 일부 농민들이 농업협동화에 불만을 드러냈다.<sup>52)</sup>

하지만 전쟁으로 농업생산 기반을 상실한데다 차별정책까지 실시되는 상황에서 자영농이 농업협동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북한 당국 발표에 따르면 1953년 총 농가의 1.2%만이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었는데, 불과 5년 여 만에 모든 농가가 협동조합에 가입했을 정도로 농촌 협동화는 빠르게 진행됐다.<sup>53)</sup> 조선노동당은 공식 당사(黨史)에서 “당의 현명한 령도”로 “농업협동화가 승리적으로 완수됐다”고 자랑하지만,<sup>54)</sup> 만약 한국전쟁기 극심한 농업생산 기반 파괴가 없었고, 좀 더 긴 시간 동안 개인영농이 이루어졌다면, 북한도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협동화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다.<sup>55)</sup>

다음으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살펴보자. 북한 당국(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은 1946년 8월에 일본인·친일파 소유 산업시설들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해 전 산업의 약 90%에 해당하는 공장, 제조소, 탄광, 광산, 발전소, 철도, 체신기관, 은행, 문화기관 1,032개를 국유화했다.<sup>56)</sup>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단초를 놓은 셈이다.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6년 말부터 본격화돼 1958년 말에 마무리됐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농업협동화보다 수월하게 진행됐다. 첫째, 농업에 비해 협동화해야 할 대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당시 개인상업은 소매상품유통부문에 여전히 상당한 비중(32.5%)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개인공업은 공업생산의 겨우 3.9%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둘째, 개인상공업자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전쟁으로 큰 타격까지 입는 바람에 자발적으로 협동화를 지향했다.

51) 김성보, 『북한의 역사 1』 (서울: 역사비평사, 2011), p. 187.

52)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공산권연구실 편, 『북한공산화 과정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72);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pp. 700~705.

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통계집』, p. 61.

54)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280.

55) 폴란드는 1953년에 농업 집단화를 시작했는데 1955년까지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을 합쳐 전 농지의 21.6% 집단화에 그쳤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49년 농업 집단화가 시작되고 1952년까지 전 농지의 30% 밖에 집단화되지 않았다. 북한처럼 협동화의 세 형태를 제시하며 비교적 순탄하게 집단화가 이루어진 헝가리의 경우도 1948년 집단화 시작 이후 1953년 3월 현재 전 농지의 48.7%(협동농장 26.5%, 국영농장 12.2%)만이 집단화됐다. 이정희, 『동유럽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p. 491, pp. 510~511, p. 526.

56) 고승효 지음, 이태섭 옮김, 『현대북한경제입문』, pp. 46~49;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pp. 313~317.

1957년 현재 한 개인기업 당 평균노동자 수는 2.5명, 5명 이상 고용기업은 14%뿐이었고, 같은 해 개인상점 6,584개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324명에 불과했다. 셋째, 농업 협동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개인상공업자들이 원자재를 구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이다.<sup>57)</sup>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에서는 소규모 상공인, 농민 등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본가계급은 철저히 사라졌다. 앞으로 4장에서 보겠지만, 자본가계급 소멸론은 적어도 1990년대 이후 시장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실제와 부합했던 것이다.

## 2. 관료 : 생산수단과 조직 자산을 소유한 착취계급

일제와 자본가계급이 소유하고 있던 생산수단은 협동농장을 제외하면, 이렇게 조선노동당의 수중에 들어왔다. 자본주의 사회의 관료는 경제 영역에 자신의 기반을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 계급을 구성하지 않지만, 사회주의 사회의 관료는 경제 영역에 기반을 마련하는 경우 독자적 계급이 될 수 있다.<sup>58)</sup> 곧 북한 당·국가 관료에게도 생산수단 국유화는 독자적 계급형성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잉여가 시장기제가 아니라 조직 자산을 소유한 관료에 의해 정치적·수직적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만약 수직적 배분체계의 최하층에 존재하는 국유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sup>59)</sup> 경제적 잉여가 제대로 배분되지 않을 경우, 무엇보다 관료가 국가기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몫 이상으로 경제적 잉여를 가져갈 경우, 관료는 전형적인 착취계급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조선노동당의 기본입장은 북한 관료는 착취계급에 복무하던 관료배가 아니라 인민에게 복무하는 일꾼이라는 것이다. 물론, 조선노동당도 북한에 ‘관료주의’, 곧 “낡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조선노동당은 온전히 일꾼들의 ‘노력’에 따라 관료주의를 없앨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관료주의는 일꾼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며 일부 일꾼들이 혁명적경험이 적고 대중을 혁명적으로 옹호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령도방법을 체득하지 못한데서 나온다.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어긋나는것을 명령과 호령의 방법으로 내리먹이며 군중우에 올라앉아 틀만 차리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진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며 자기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서 책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당적견지에서 벗어나 되는대로 일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관료주의를 없애는데서 중요한 것은 일꾼들이 청산리방법<sup>60)</sup>을 철저히 구현하며 모든 사

57) 고승효 지음, 이태섭 옮김, 『현대북한경제입문』, pp. 84~96;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260.

58) 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p. 375.

59) 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pp. 376~377.

60) 청산리방법은 김일성이 1960년 2월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협동농장과 강서군 당 위원회를 현지지도하며

업에서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일군들이 정확한 령도방법을 확립하고 정치실무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범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sup>61)</sup>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미 1930년대에 트로츠키가 냉철히 지적했듯이 “상부의 자기 방어용 수단”일 뿐, 관료의 착취계급성 자체를 인정하는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당·국가는 아래 인용문처럼 인민대중에게 ‘충성’을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인민대중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이다. (...) 그러나 인민대중은 저절로 사회적 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 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 하는데서 결정적인 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이다. (...)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성다하여야 하며 수령과 당의 령도를 적극 받들어 나가야 한다.<sup>62)</sup>

당·국가를 향한 충성에는 정치적 차원뿐 아니라 당연히 경제적 차원도 존재한다. 해방 직후 국가를 향해 벌어지던 애국미 헌납 운동으로 시작된<sup>63)</sup> 경제적 차원의 충성 요구는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국가의 착취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당·국가의 착취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동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 밖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하지만, 북한사회의 착취기제는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하다. 북한의 기본적 착취기제는 국가가 국가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등의 규모를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감가상각금, 협동단체기업이익금, 봉사료수입금, 사회보험료 같은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협동단체기업이익금과 사회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가예산수입에서 기본은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입니다. 우리는 주로 국영기업소들로부터 들어오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가지고 국가를 관리운영해나가고있습니다. 개인들한테서 세금을 받아야 그것은 몇푼 되지 않으며 국가를 관리운영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sup>64)</sup>

---

만들어진 대중 지도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은 상부기관이나 윗사람은 하부기관이나 아랫사람을 도와주고,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앞세우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올바르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종석, 『북한의 역사 2』 (서울: 역사비평사, 2011), pp. 22~23.

61)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용어사전』, p. 138.

62)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696~697.

63) 애국미 헌납 운동은 황해도 재령 농민 김제원이 현물세를 내고 남은 곡식 30가마니를 1946년 12월 10일 재령군농업현물세헌납경축대회에서 국가에 헌납하면서 시작됐다.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pp. 702~703.

64) 김일성, “인도학계인사들과 한 담화(1983.6.12),”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1.

거래수입금은 생산물 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간접세고,<sup>65)</sup> 국가기업이익금은 생산수단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가 국가에 납부하는 순소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비슷한 형태다.<sup>66)</sup> 북한의 국가는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가 국가기업이익금이나 계획된 자체충당금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적립비율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잉여의 배분을 조정하기도 한다.<sup>67)</sup> 부불(不拂)노동의 규모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이 결정한다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관료가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sup>68)</sup> 북한사회 착취기제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나는 보조적 착취기제라고 할 수 있는 관료의 뇌물 수수, 관료의 직장자산 절취(pilfering) 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sup>69)</sup> 다른 하나는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시장으로부터의 착취가 기본적 착취기제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착취기제 변화가 북한의 계급구조와 관련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는 4장에서 서술하겠다.

### 3. 노동계급 :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결과 국영기업에서 일하게 된 노동계급은 과연 조선노동당이 말하는 대로 “그 사회경제적처지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으로”<sup>70)</sup> 되었을까? 일단,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해두자.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인민대중이 지녀야 할 혁명적·선진적 의식의 핵심이 ‘집단주의(collectivism)’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객관적 조건 변화가 주관적 의식 변화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집단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사회의 공통이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개별이해보다 사회의 공통이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상이다.<sup>71)</sup>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북한의 오래된 구호는 집단주의의 대표적 상징이다. 어떠한 사회에서도 공식적 도덕규범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사고를 완벽히 결정짓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sup>72)</sup> 김일성은 집단주의가 인민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사회를 목표로 삼았다.<sup>73)</sup>

65) 북한에서는 1957년 이래 소비품 생산·판매기업에게만 거래수입금 납부의무를 부여하다가, 1994년부터는 생산수단에도 거래수입금을 부과했다. 김진환, 『북한위기관: 신화와 냉소를 넘어』 (서울: 선인, 2010), p. 386.

66)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 34~35, pp. 130~131.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은 2002년에 국가기업이익금으로 합쳐졌다가, 2011년에 거래수입금이 부활했다.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서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04), p. 15;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2013), p. 54.

67) 김진환, 『북한위기관: 신화와 냉소를 넘어』, pp. 200~203.

68) 김진환, 『북한위기관: 신화와 냉소를 넘어』, pp. 76~92.

69)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pp. 328~339.

70)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p. 320.

71) 김진환,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내면화,” 강정구 외,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p. 416.

단, 조선노동당은 모든 인민대중이 집단주의를 내면화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속적인 사상개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sup>74)</sup> 이처럼 특정 계급의 의식이 시간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조건이 바뀌면, 그리고 노력하다보면 그에 따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톰슨은 아래처럼 ‘계급적 경험’과 ‘계급의식’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명쾌하게 비판한다.

계급적 경험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맺게 되는, 바꿔 말하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생산관계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계급의식이란 이러한 경험들이 문화적 맥락에서(in cultural terms) 조정되는 방식, 즉 전통, 가치체계, 관념 그리고 여러 제도적 형태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이다. 경험은 결정된 모습을 띠지만, 계급의식은 그렇지 않다.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는 유사한 직업집단들의 대응태도에서 우리는 어떤 논리(logic)를 볼 수는 있지만, 어떤 법칙(law)을 확인할 수는 없다. 계급의식은 서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만 결코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화적 ‘지체’(lag)와 왜곡이 골치아프기 때문에 이 문제를 떠나 일종의 대체이론으로 쉽사리 옮겨가곤 하는 것이다. 곧 계급의식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어떤 것으로 들춰내는 정당이나 분파나 이론가 등으로 옮겨가는 것이다.<sup>75)</sup>

어쨌든, 조선노동당은 자신이 농민, 인텔리를 이끌어야 할 계급으로 규정한 노동계급을 투철한 집단주의자로 만들기 위해 고집스레 노력해왔다. 조선노동당이 노동계급 집단주의화를 위해 선택한 대표적 수단은 바로 대중운동이다.

한국전쟁 이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시작된 집단주의적 사상개조운동은 1950년대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이어졌다.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은 1950년대 중반 정치권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8월 종파사건’), 소련·중국의 간섭과 압력, 남한과의 군사적 대치 등으로 경제건설에 어려움을 겪자, 일부 선진노동자들을 앞세운<sup>76)</sup> 대대적인 절약증산운동에 나섰다. 그런데 ‘천리마운동’으로 이름 붙여진 이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분히 개인적인 노력경쟁운동으로 흐르고 있었다. 열성 노동자, 선진 노동자들은 계획과제를 초과 완수했지만,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계획과제를 미달했다. 국가는 열성자, 혁신자들의 충성을 정치적·물질적으로 적극 보상했고, 이 결과 노동자계급은 상층이동에 성공한 특권 노동자

72) 사회학자 마페졸리(M. Maffesoli)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대중은 언제나 공식적인 도덕규범(morale)을 넘어서 자신들의 독특한 생활윤리(éthique)를 창출한다. 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가 규정한 도덕을 어릴 때부터 체화하도록 사회화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는 이러한 공식적 규범으로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박재환, “일상생활 사회학의 이론적 전통,” 박재환 외,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p. 81.

73)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1945.8.20),” 『김일성 저작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59; 김일성,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1955.4.1),” 『김일성 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64.

74) 강덕서, 『새 인간 형성과 천리마작업반운동』(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pp. 3~6.

75) E. P 톰슨 지음, 나중일 외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상)』, pp. 7~8.

76)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산업주의에 굴복한 20세기 사회주의』(서울: 박종철출판사, 2002), p. 260.

와 일반 노동자로 분화되어 갔다.<sup>77)</sup>

그러자 김일성은 집단주의 사상교양 전면화를 강도 높게 촉구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강선제강소의 진응원 작업반이 1959년 3월 8일 「나는 집단을 위하여, 집단은 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기했다.<sup>78)</sup> 조선노동당은 이 운동이 물질적·정치적 보상보다는 사람들의 사상의식 개조, 공산주의 의식 제고를 통해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며,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상업, 교육, 문화, 보건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말한다.<sup>79)</sup> 김일성은 이 운동에 1961년 말 2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가했다고 주장했는데,<sup>80)</sup> 당시 북한 총인구가 1,078만9천 명이었으므로,<sup>81)</sup> 운동의 확산 속도는 대단히 빨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82)</sup>

1960년대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시대였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시대였다. 조선노동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혁명이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동시에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3)</sup>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1975년부터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보다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서<sup>84)</sup>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시작됐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조선노동당이 노동집약적 경제성장에서 기술집약적 경제성장으로 전환하려던 1970년대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술혁명이 많이 부각되기는 했지만, 역시 선차적인 목표는 사상혁명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노동계급 속에서 당과 수령, 주체사상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고, 계급의식과 집단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게 김정일의 의지였다.<sup>85)</sup>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 일상이 되어버린 대중운동을 통해서 노동계급의 사상이 얼마나 조선노동당의 의도대로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개인의 식의 은밀한 내면까지 확인하는 일이 애당초 쉽지 않은데다가, 북한 당국이 남한사회에서 그나마 활용되는 의식조사방법, 예를 들면 양적 설문조사나 질적 면접조사를 했더라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리마칭호를 받은 단위나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의 ‘숫자’는<sup>86)</sup> 선진 노동자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 노동계급 의식

77) 이태섭, 『김일성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2001), p. 183; 김연철, “195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1998), pp. 397~403.

78)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p. 850.

79) 직업동맹출판사, 『천리마기수독본』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1), pp. 32~34.

80)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61.9.11),”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03.

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통계집』, p. 18.

82) 김진환, “조선로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pp. 40~41.

83)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pp. 671~672.

84)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p. 28.

85)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75.7.1),”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69.

개조의 성패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등 최고 권력자(수령)이기에 북한사회 현실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이들의 문헌을 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노동계급 사상의식개조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발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발언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김정일의 지적과 평가다. 김정일은 1981년에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 때까지는 열성을 내다가도 쟁취한 다음에는 맥을 놓거나 중전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운동의 대중적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sup>87)</sup> 김일성도 1985년 말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고,<sup>88)</sup> 김정일은 1989년 11월 전국노동행정일군 강습회에 보낸 서한에서 “혁명적 로동생활기풍”, “주체의 로동관” 확립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서한에서 김정일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 이면에는 1980년대에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부업이 활성화되면서 확산되고 있던 개인이기주의적 노동에 대한 우려가 놓여 있었다.<sup>89)</sup>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은 집단주의적이며 자각적인 로동생활기풍입니다. (...) 과도적인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머릿속에 로동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사상잔재가 남아있는것만큼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이 저절로 높이 발양되는것은 아닙니다. (...) 온 사회에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에 주체의 로동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입니다. 주체의 로동관은 로동의 주인으로서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로동에 대하는 관점과 태도입니다. (...)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로동은 자신의 일시적인 향락을 가져다줄수 있을지는 모르나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 개인부업과 같은 로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전형적인 로동형태로는 될수 없으며 생산력이 발전되고 사회주의적로동이 강화되는 과정에 없어지게 됩니다.<sup>90)</sup>

그러나, ‘개인부업’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개인부업은 어떤 사회에서도 사라질 수 있는 경리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1990년대 들어 개인부업은 더 활발해졌고, 그에 따라 사회

86)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한창이던 1961년 8월 말 당시 12만5,028명을 망라하는 4,958개 작업반과 직장이 천리마 칭호를 받았으며, 1,495명을 망라하는 55개 작업반은 2중천리마 칭호를 받았다. 한편, 1978년에는 18개 단위, 1979년에는 17개 단위, 1980년에는 34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 받았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61.9.11),”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0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3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119.

87)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1.3.8),” 『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33~35.

88) 김일성,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1985.11.19),”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454.

89) 김진환, 『북한위기관: 신화와 냉소를 넘어』, p. 100.

90) 김정일,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9.11.27),” 『김정일 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412~415.

에서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만연했다. 당시 김정일이 꼽은 대표적 비사회주의적 현상은 “민심을 소란시키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어 군중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불량행위”, “법을 어기고 국가사회재산을 류용하거나 탐오랑비하는 현상”, “상적행위를 비롯하여 돈과 물건을 가지고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현상” 등이었다.<sup>91)</sup>

1990년대 중반 들어 경제사정이 더욱 심각해지자 결국 김정일은 노동계급 ‘대신’ 군대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선봉에 세우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선택했다. 김정일은 1995년 1월 1일 전연지대(前緣地帶)에서 60마일 후방에 위치한 고사포중대를 현지지도하면서 선군정치를 본격화했다. “일부 사람들은 나라가 처한 형편에 비추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루빨리 공장을 찾으시여 로동계급부터 일으켜주시었으면 하는 소망을 표시”하기도 했지만,<sup>92)</sup> 군대를 선봉에 세우겠다는 김정일의 결심을 뒤집지는 못했다. 김정일이 1997년 3월에 했다는 아래 발언들을 보면 당시 그가 노동계급을 군대에 비해 “혁명적 신념과 강의한 의지”가 부족한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따라배워야 할 투쟁정신이며 오늘의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기위한 사상정신적량식입니다. (...)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군인들의 예술공연을 보여 주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에서 군수공장로동계급부터 불러 일으켜 그들이 앞장 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자면 그들속에서 혁명적신념과 의지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 깊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sup>93)</sup>

이후 조선노동당은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라는 김정일의 새로운 견해에 따라,<sup>94)</sup> 선군정치를 아예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원칙, 곧 군대가 앞서고 노동계급이 뒤따르는 원칙을 구현한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했다.<sup>95)</sup> 오늘날 조선노동당의 이론적 입장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따라 독점자본의 지배가 강화되고 반동적인 부르주아사상문화가 더욱더 범람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적각성과 의식화, 혁명화가 억제되게 되었”기 때문에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리는 것”이 “어길 수 없는 혁명의 공식”은 아니라는 것이다.<sup>96)</sup>

정리하면, 노동계급이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이라는 조선노동당의 오랜 주장은 1970년대까지는 몰라도, 김일성·김정일의 문헌을 통해 그들이 비판받기 시작한 1980년

91) 김정일,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2.12.21),”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74.

92) 당력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정치(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75.

93) 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1997.3.17),”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292~295.

94) 김진환,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 서술,” 정영철 외, 『조선로동당의 역사학: 조선로동당사 비교연구』, pp. 229~231.

95) 당력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정치(증보판)』, pp. 163~178.

96) 당력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정치(증보판)』, pp. 166~167.

대 이후부터는 북한의 실제와 거리가 있다. 앞에서 인용한 톰슨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북한 노동계급은 유사한 계급적 경험을 하면서도 동일한 계급의식을 갖지는 않았던 것이고, 이에 따라 조선노동당 역시 이제는 북한 노동계급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특정한' 계급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또한 노력하면 개인의 사상의식을 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조선노동당이 볼 때,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대중운동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 노동계급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에서 동요한다는 건 좀처럼 이해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의 선택은 이 난제를 풀기보다는 말 안 듣는 노동계급에서 말 잘 듣는 군인으로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 4. 농민 혁명화 실패와 인텔리 장악

농민과 인텔리는 조선노동당의 주장과 의지에 맞게 변했을까? 먼저 농민 혁명화부터 살펴보자. 농업 협동화 이후 농민은 노동계급처럼 일해야 했다. 모든 생산과정이 체계화·합리화되고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노동규율이 부여됐다. 노동에 근대적 시간관념이 도입되어 규칙성이 만들어지고, 작업을 마친 이후 시간도 개인 여가보다 회의와 학습이라는 공공 영역으로 짜여졌다. 마을과 주택도 공동경작과 공동 사회문화 활동에 적합하도록 집단적으로 개조됐다.<sup>97)</sup> 조선노동당은 이러한 협동화 효과에다가,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혁명,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와 방조,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점진적 전환<sup>98)</sup> 등을 더해<sup>99)</sup> 농민 혁명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협동화 이후 10여 년이나 흘렸는데도 아래 김일성의 지적처럼 농민 혁명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 제도는 멀리 앞서나가고있지만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은 아직도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농민들의 머리에는 리기주의와 소부르조아 사상, 집단주의에 어긋나는 낡은 사상이 뿌리깊이 남아있습니다. 협동농장들에서 왜 소를 집집마다 나누어기르면 잘 기르는데 공동축사에 넣으면 되는대로 기릅니까? 어째서 농민들이 자기가 먹을 양곡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남겨두려고 하면서 나라에 팔 수매곡은 아무것으로나 그것도 될수록 적게 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한두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농민들이 소부르조아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날 일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sup>100)</sup>

97) 김성보, 『북한의 역사 1』, p. 189.

98) 농촌 협동화가 완성되던 당시에도 국영농장은 존재했다. 1958년에는 협동농장 3,843개, 국영농목장 178개였는데, 1964년에는 협동농장 3,778개, 국영농목장 191개로 전자는 줄고, 후자는 늘었다.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통일원, 1996), p. 228.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이란 이처럼 국영농목장의 상대적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것이다.

99)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한 테제(1964.2.25),”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 616~628.

100) 김일성, “농민을 혁명화하며 농업부문에서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1967.2.2),”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102~103.

비록 농민이 소부르조아 사상에 젖어 있더라도, 조선노동당은 1980년대까지 협동농장에 농기계, 비료, 노동력 등을 무상 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식량증산을 독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 말에는 식량 배급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동자, 사무원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약간 넘는 52% 정도였지만(〈표 4〉), 1993년 말에는 76.5%에 이를 정도로(〈표 5〉) 공업화가 진전되고, 관료 규모가 늘어났다. 전체 인구에서 농민의 비중은 줄었지만, 농민 역할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진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국가 역시 농민을 자기편에 두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표 5〉 1993년 말 현재 북한의 직업별 인구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자	여자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인력 비중
노동자	6,944,058	3,332,530	3,611,528	63.1	52.01
사무원	1,471,859	978,093	493,766	13.4	33.55
농민	2,588,925	1,251,228	1,337,697	23.5	51.67
합계	11,044,842	5,561,851	5,442,991	100.0	49.46

\* 노동자는 국영기업소나 협동기업소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 사무원은 정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무원, 농민은 협동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가리킴.

※ 출처: 노용환, “북한의 인구센서스결과 분석,” 『보건복지포럼』 1997년 4월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 50. 표 7.

그런데 국가가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자의 생활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급 식량의 가격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고, 그에 따라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식량의 수매 가격 역시 낮게 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노동당이 공개적으로 밝힌 데 따르면 2002년 상반기 현재 쌀 1kg의 수매가격은 82전, 판매가격(배급가격)은 8전으로, 도시노동자, 사무원의 실질 생활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3.5%에 불과했다.<sup>101)</sup> 농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낮은 수매가를 상쇄해줄 수 있을 만큼 농기계, 비료, 노동력 등을 제공한다면 국가수매에 적극 응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실제 1980년대 후반부터 중공업 부문의 생산력이 저하되면서 농업 생산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북한 농민은 쌀을 수매하지 않고 감춰둔 채 시장에서 몰래 파는 “상적행위”에 몰두했다.

당일군들이 농장원들 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면 군량미를 보장하는 문제도 풀 수 있고 상적행위를 하는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협동농장들과 농장원들이 이러저러한 구실 밑에 적지않은 식량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당일군들이 농장원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지난 3년 동안 연이어 흉년이 들어 국제기구에서 주는 식량을 받아먹고 있다, 전세계가 식량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은 쌀을 주겠다는 나라도 없다, 식량문제 때문에 나라가 큰 곤란을 겪

101) 조선로동당출판사,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KDI 북한경제리뷰』 제5권 제1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p. 43.

고 있다, 쌀이 없어 군량미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 당신들의 아들 딸과 손자들이 다 군대에 나가 있는데 당신들이 군량미를 보내주지 않으면 누가 보내주겠는가, 군량미를 보내주지 않으면 미국놈들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당신들도 다시 노예가 되고 당신들의 아들, 딸, 손자들도 노예가 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느라고 식량을 밀매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가 아닌가고 내놓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 지금 농장원들 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잘하지 못하다보니 그들의 사상의식 수준이 해방 직후의 김제원 농민보다 못합니다.<sup>102)</sup>

협동농장 농민들의 국가수매 거부는 도시에 살던 노동자, 사무원들을 심각한 식량난으로 몰아갔다.<sup>103)</sup> 1990년대 식량난 속에서 농민들이 보여준 행태는 조선노동당의 지향과 실제의 괴리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해준다. 1990년대 중반 북한 농민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료나 노동계급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다. 톱슨의 표현을 빌자면, 북한 농민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비로소 특정한 계급의식을 공유한 독자적 계급으로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은 이처럼 농민 혁명화에 실패했지만, 인텔리만큼은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해방 직후부터 한편으로는 이른바 낡은 체제에서 교육받은 “오랜 인텔리”를 포섭 또는 숙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교양을 체계적으로 받은 ‘새 인텔리’ 육성에 주력했다.<sup>104)</sup> 조선노동당은 노동계급, 농민과 마찬가지로 인텔리 혁명화 과정에서도 대중운동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1970년대 초반 활발히 진행된 3대혁명소조운동<sup>105)</sup>이 대표적이다. 조선노동당이 키운 새 인텔리는 3대혁명소조운동을 계기로 오랜 인텔리의 자리를 점차적으로 대체해나갔다.

물론 이후에 새 인텔리의 동요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김정일은 1990년 9월에 “지금 일부 인텔리들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일시적인 난관이 생겨도 동요하면서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부리”고 있다며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때가 많은 인텔리들” 사이에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특별히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sup>106)</sup> 다른 계급과 마찬가지로 ‘일부’ 인텔리도 1990년대 들어 북한 안팎의 조건이 나빠지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일부 인텔리는 경제관리에서 당·국가 간섭은 낮추고 국영기업소의 자율권은 높이

102) 김정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1996.12.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1997), p. 313.

103) 북한 식량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아래 책 참조. 김진환, 『북한위기론 : 신화와 냉소를 넘어』, pp. 287~292.

104) 김명수, “『주체의 인텔리론』: 이론과 실제,” 『동아연구』, 제29집 (1995), pp. 97~109;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pp. 171~177.

105) 이 운동은 당 일꾼, 국가경제기관 일꾼, 과학자, 기술자와 청년인텔리의 협력을 통해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려는 시도였다.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p. 28.

106)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텔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1990.9.20),” 『김정일 선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17~220. 실제 이 지시 이후 몇 년에 걸쳐 지식인 대상 교양사업이 강화됐고, 1992년 12월에는 국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조선지식인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진환, 『북한위기론: 신화와 냉소를 넘어』, pp. 298~299.

며, 집단주의 대신 개인주의, 정치도덕적 자극 대신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게 낙후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동요하던 노동계급, 농민의 의식과 같은 맥락에 있었으므로, 인텔리를 당·국가 편에 묶어 두려는 관료에게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다. 직접 쓴 회고와 논문들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황장엽은 당시 일부 인텔리의 동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데,<sup>107)</sup> 황장엽이 1997년 망명하면서 동요하던 인텔리들은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조선노동당이 일부 인텔리의 주장과 유사한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한 이후부터는 주목할 만한 인텔리의 동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 IV. 북한의 시장화와 계급 변화

조선노동당은 시종일관 무계급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북한의 역사는 오히려 계급사회로 진전해온 과정이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경제침체 국면에서부터 시작된 ‘시장화’의 영향으로 관료, 노동계급, 농민이라는 3대 계급으로 구성된 계급구조가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북한의 시장화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경제난과 시장화에 따른 계급 변화의 특징을 정리해볼 것이다.

### 1. 북한의 시장화 원인과 과정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자원(resources) 대부분이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에 의해 배분되는 데 비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관할하는 계획기구(plan mechanism)를 통해 대부분 배분된다. 시장기구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행위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메카니즘을 말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시장화(marketization)’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장소’로서의 시장(market place)을 포함해 시장기구의 자원배분역할이 확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시장화는 당·국가의 의지에 따라 위로부터 이루어지기도 하고, 노동계급, 농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아래로부터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소유구조와 자원배분기구의 친화성<sup>108)</sup>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의 시장화는 사적 소유에 대한 국가·협동적 소유의 우위라는 사회주의 사회 소유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소련공산당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주기적 공황, 실업, 빈곤 등은 자원배분의 ‘무정부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았고, 이를 극복하는 첩경은 시장을 계

107) 1990년대 초반 지식인의 동요,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어진 황장엽과 김정일의 논쟁 등은 아래 책 참조. 김진환, 『북한위기관: 신화와 냉소를 넘어』, pp. 305~312.

108) 중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시장기구 활성화에 유리하며, 중요 생산수단의 국가·협동적 소유는 계획적 자원배분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양자는 함께 변화하는(共變) 경향이 있다.

획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정립된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구조는 경제의 비효율성과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1960년대 이후 국가·협동적 소유 중심의 소유구조는 그대로 둔 채, 시장기구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이에 비해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사회 경제구조가 정착된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눈에 띄는 경제개혁 없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해왔다.

물론 조선노동당도 시장기구가 아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모든 자원이 계획기구만을 통해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시장기구가 존재한다고 봤다. 첫째,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생산협동조합, 협동농장, 수산협동조합 등)가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품을 ‘상품’으로서 매매하는 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둘째, 아직 국가가 식료품, 의류, 일용품 같은 소비재를 국영상업망을 통해 전일적으로 공급할만한 생산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주민들은 부족한 소비재를 시장에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대표적인 시장기구가 바로 ‘농민시장’이다. 농민시장은 농민들이 협동농장에서 생산했거나 개인 텃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일부를 주민들에게 직접 팔던 장소다. 농민시장의 상품가격은 국가감독 없이 온전히 농민이 결정했다. 국가는 농민들이 농민시장에서 거둔 수입으로 부족한 소비품을 구매하고, 도시노동자들은 농민시장을 통해 국가가 채 보장해주지 못한 부식물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순기능 때문에 농민시장을 허용해왔다.<sup>109)</sup>

북한 당국 통계에 따르면 1963년까지 전체 소매상품유통에서 농민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표 6>), 북한이탈주민들도 1980년대 초반에 농민시장 의존도가 매우 낮았다고 증언하고 있다는<sup>110)</sup>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적어도 1980년대 초반에는 농민시장이 농민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보전, 도시민에게 필요한 부식물과 소비품 공급 같은 본래 목적에 맞게 기능해왔다고 볼 수 있다.<sup>111)</sup>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입장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이용은 하되,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 6> 1960년대 소매상품유통의 소유형태별 구성비 (%)

연도	국영 및 협동단체 유통액		농민시장	개인상업
	국영	협동단체		
1953	32.0	35.5	-	32.5
1959	76.6	23.0	0.4	-
1960	78.8	20.4	0.8	-
1963	80.2	19.2	0.6	-

※ 출처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통일원, 1996), p. 522.

109) 김진환, “북한 정치·경제구조의 형성과 특징,” 강정구 외,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pp. 386~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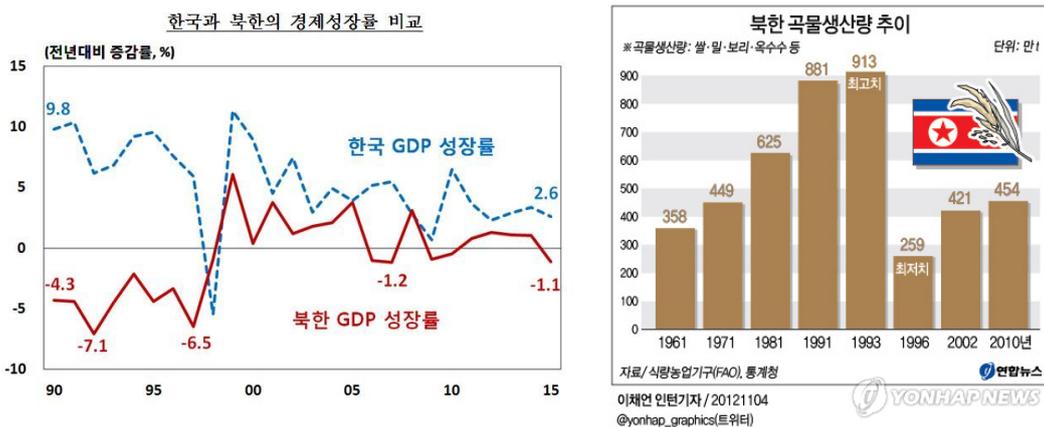
110)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p. 174.

111) 김진환, 『북한위기론: 신화와 냉소를 넘어』, pp. 92~93.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전반적 경제침체 속에서 북한 당국이 계획기구를 통한 소비품과 식량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시장기구의 역할이 점차 커지게 된다. 북한이 탈주민들도 농민시장 의존도가 198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났다고 증언한다. 농민시장에서 부식물 구입 빈도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법적으로 금지되던 식량 거래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112)</sup> 1980년대 들어 북한 당국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부업 활성화 정책(부업경리 활성화)을 취한 것도 시장기구 역할 증대에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은 탈냉전에 따른 사회주의 시장 상실, 거듭된 자연재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누적, 노동자·농민의 생산의욕 저하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부족과 공장 가동 중단, 심각한 식량 부족 등 최악의 경제난을 겪게 된다(〈그림 2〉). 식량 배급이 끊기고, 국영상점 진열대는 점차 비어가자 주민들은 합법적인 농민시장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관리를 벗어난 암시장으로까지 몰려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해야 했다.

〈그림 2〉 북한 경제성장률 및 곡물생산량 추이



결국 조선노동당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시장기구를 궁극적으로 제거하려던 방향에서 벗어나 ‘계획기구의 우위 속에서 시장기구와의 적극적인 공존’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조선노동당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협동농장 농장원 뿐 아니라 북한 주민 누구라도 텃밭에서 식량을 가꾸 농민시장에 가져다 팔 수 있게 했다. 나아가 2001년에는 합법적 소비재 거래시장인 농민시장에 더해 일종의 생산수단 거래시장인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새롭게 도입했고, 2005년에는 외국과의 생산수단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입물자교류시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조선노동당의 시장 공존 의지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 조치는 2003년 종합시장 설치다. 조선노동당은 2003년 3월에 농민시장을 그동안 거래가 금지됐던 공업제품도 사고 팔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확대·재편하면서 시장을 사회주의 상품 유통방식의 하나로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다.

112)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p. 174.

〈표 7〉 농민시장과 종합시장의 차이

	농민시장	종합시장
시장 참여 주체	개인(농민+도시민)	개인,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거래 품종	농토산물	연유(석유제품), 생고무를 비롯한 국가전략물자들과 생산수단 등 판매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농토산물과 식료품, 생활필수품, 수입상품 등
가격조절·통제	없음	쌀, 식용 기름, 사탕가루, 맛내기 등 중요지표들에 대해서만 실정에 맞는 '한도가격' 설정
시장사용료	없음	시장관리소에서 징수
세금	없음	매월 소득액 신고 뒤,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국가납부금' 납부

그런데, 종합시장 제도화는 조선노동당 입장에서 볼 때 계륜과도 같은 조치였다. 일단 당·국가는 인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 또는 개인재산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들어 낸 부(富)를 시장사용료, 국가납부금 같은 형태로(〈표 7〉) 효과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종합시장 제도화 이후 국가의 예산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표 8〉) 시장이라는 새로운 착취기제가 갖춰진 덕분이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은 당연히 사회적 문제도 낳는다. 예를 들어 물자교류시장은 국가의 생산재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시장기구 확대는 이기주의, '경제적 계층화', 빈부 격차 등을 심화시켜 주민 간 상호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일부 상인들과 관료들의 부정·부패행위 증가로도 이어진다.<sup>113)</sup>

〈표 8〉 북한의 국가예산 규모 추이 2000~200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달러 기준 (억 달러)	93.2 (-0.8)	97.6 (4.8)	18.9 (-80.6)	22.7 (20.1)	25.3 (11.5)	27.8 (10.0)	29.7 (6.6)	32.1 (8.0)	34.9 (8.7)
북한원 기준 (억 북한 원)	204 (0.1)	216 (5.7)	2,885 (1,237.4)	3,294 (14.2)	3,513 (6.7)	3,886 (10.6)	4,197 (8.0)	4,332 (3.2)	4,515 (4.0)

\* 2002년부터 재정규모가 크게 변동한 것은 7·1조치에 따른 가격인상(약 25배)과 환율상승(약 70배) 때문임.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출처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최근 변화 평가," 『통일경제』 2009년 봄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9), p. 74.

식량과 소비품 부족이 여전한데다 조선노동당의 시장 합법화 조치까지 결합되면서 2000년대 중반 시장 숫자는 빠르게 늘어났다. 평양에서는 2003년 통일시장에 이어 2005년 중구시장이 현대식 시장으로 문을 열었고, 송신시장, 칠골시장, 서성시장 등 18개 구역에 구역별로 1~3개의 시장이 존재하며, 2007년 당시 전국적으로는 300여 개의 시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장거리 유통업자들의 활동으로 동일 상품의 지역 별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신의주, 청진, 평성 등에 일종의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거점시장도 형성됐다.<sup>114)</sup>

113) 전현준 외,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323~327.

114) 전현준 외,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p. 321.

조선노동당은 이러한 시장기구 확대에 계층 격차, 개인 경제활동의 급성장, 계획경제 부문에서의 노동력 이탈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결국 2007년부터 시장 통제 정책을(〈표 9〉) 본격적으로 실행하다가, 2009년 11월에 예고 없이 화폐개혁을 단행해 시장 기득권층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표 9〉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시도

시기	내용
200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li> <li>• 장사 물품을 20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함</li> </ul>
200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억원 이상 소유자는 당국 신고 뒤 1억원 이상 액수 국가 보관</li> <li>• 중앙검찰소 요원들의 전국 시장 검열</li> </ul>
2007. 9	쌀 판매 금지
2007. 10	신의주, 함흥 등지에서 골목장사, 손수레장사 철폐 지침 전달
2008 초	전국 시장에서 공업품 매장을 없애고 농토산물 판매만 허용한다는 소식 전해짐
2008. 3	자강도 강계시에서 40세 미만 여성의 장사를 금지시키고 무조건 직장에 배치하도록 지시
2009. 1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환원한다는 방침 발표 → 주민 반발로 무산
2009. 6	대표적 도매시장인 평성시장 폐쇄 결정
2009. 11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해 현금 다량 보유 계층의 현금을 환수함으로써 시장 활동의 재정적 기반 축소 시도
2010. 1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환원한다는 방침 재발표

※ 출처: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실패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15권 1호 (2012), pp. 90~94. 양문수,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pp. 132~134.

하지만, 화폐개혁과 시장폐쇄 선언(2010. 1) 직후부터 북한 원화 가치 추락과 달러화·위안화 선호가 심화되고, 물가 불안과 공급 부족이 심해지자 북한 당국은 다시 시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최근 북한 당국은 협동농장의 생산·분배 단위를 사실상 가족 단위로 축소한 ‘포전담당책임제’(2012년 도입, 2013년 전국화), 협동농장 생산물의 30%를 농장원들이 시장 판매까지 포함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3·7제’ 등을 실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식량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제품 개발, 보수 분배(차별임금제), 수출까지 생산·분배의 전 과정에서 기업소 지배인의 자율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3. 8. 15)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자재 자체 조달 → 시장 수요에 맞춘 제품 생산 → 시장 판매’로 이어지는 메카니즘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다.

〈표 10〉 북한의 시장화(marketization) 역사

시기	형태	특징
시장 축소기 (1945년 ~1980년대 초반)	농민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만 판매</li> <li>• 식량(주식) 제외한 농토산물(부식)만 거래</li> </ul>
시장 확산기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농민시장(합법) + 암시장(비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시장에서 모든 개인 판매</li> <li>• 식량 포함한 농토산물·공산품거래</li> </ul>
시장 수용기 (2000년대 초반)	종합시장(합법)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합법) + 수입물자교류시장(합법) + 암시장(비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시장에서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판매</li> <li>• 판매금지 제품 제외 모든 제품 거래(negative 방식 규제)</li> </ul>
시장 통제기 (2000년대 중반)	종합시장(합법)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합법) + 수입물자교류시장(합법) + 암시장(비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시장의 농민시장화 시도</li> <li>• 장사 연령과 판매 금액 제한, 쌀·공산품 판매 금지 등</li> </ul>
시장 활용기 (2010년~현재)	종합시장(합법) +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합법) + 수입물자교류시장(합법) + 암시장(비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자유 처분 확대</li> <li>• 공산품 거래 활성화</li> </ul>

이처럼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북한 시장화 수준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에서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60~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장화 수준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가계의 시장 소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에 의문이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계층적 편향성, 설문조사 샘플의 부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달리 북한의 식량분배통계 같은 공식 경제데이터를 활용해 1990년대 후반 시장에서의 식량 분배·유통 규모가 18~35% 수준이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신뢰성 있는 북한 거시경제지표를 외부에서 입수하기 어렵다는 한계, 아직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은 북한 시장화의 실상을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sup>115)</sup>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 커티스 멜빈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2015년 10월 현재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장이 406개라고 주장했고(2010년에 비해 약 2배 증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을출은 2015년 12월에 비공식 ‘길거리장’, ‘골목장’ 등까지 포괄하면 750개가 넘는 시장이 있고, 청진시 수남시장의 경우 매대(좌판)수가 1만 2,000개가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116)</sup> 한편,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정은이

115) 양문수, “북한 시장화 논의의 지형과 담론,” 『북한의 권력과 사회동학』, 북한연구학회 2014년 하계학술회의 (2014년 7월 11일), pp. 116~121.

116) “북한,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비공식 장마당도 많아,” 『연합뉴스』 (온라인), 2015년 10월 2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5/0200000000AKR20151025008000014.HTML?input=1179m>>. “북한 소비주도층, 100만명 추정…내수시장 성장 여파,” 『연합뉴스』 (온라인), 2015년 12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2/0200000000AKR20151222090300014.HTML?input=1179m>>.

는 2016년 10월 현재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383곳 정도의 공설시장이 운영 중이고, 골목 시장, 메뚜기시장 등 비공식시장이 공설시장의 두 배 이상 존재한다고 추정했고,<sup>117)</sup>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최지영 부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에서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커져 2013년 현재 생산요소소득 측면에서는 18.5%, 최종 수요 측면에서는 28.5%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sup>118)</sup> 이러한 수치를 과거 상황과 비교하면,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50년대 초반에 개인상업이 전체 소매상품유통에서 차지했던 비중(〈표 6〉) 수준으로까지 시장 기능이 확대된 셈이다.

## 2. 북한의 계급 변화 : 소고용주 등장과 소자산가 의식 공고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식량문제도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풀어야지 매 사람들에게 자체로 해결하라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라고 하면 농민시장과 장사군만 번성하게 되고 사람들 속에 이기주의가 조장되어 당의 계급진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대중적 기반을 잃고 녹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볼스카나 체스꼬슬로벤스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급진지를 고수하지 못하면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sup>119)</sup>

김정일은 이미 1996년에 시장화가 당의 계급진지, 사회주의 계급진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일이 말하는 당의 계급진지, 사회주의 계급진지가, 조선노동당이 북한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계급 상태라면, 시장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오늘날, 이러한 계급진지는 김정일의 우려처럼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료, 노동계급, 농민이라는 3대 계급 사이에서 소고용주(small employer)라는 ‘제4의 계급’이 등장하고 있고, 1990년대에 극적으로 부각된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이 갈수록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생산수단의 국가·협동적 소유가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생산수단의 ‘사실상의 사유화’가 시작되고 있다. ‘사실상의 사유화’란 ‘법률상의 사유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sup>120)</sup>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법·제도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시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이 국가·협동단체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라이트는 소고용주를 “노동자를 고용할 충분한 자본

117) “북한 시장 커지고, 유통·부동산개발 진화 추세,” 『통일뉴스』(온라인), 2016년 10월 17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489>>.

118)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부문이란 사유 형태의 생산단위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혹은 시장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문을 의미한다. 최지영,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서울: 한국은행, 2016).

119) 김정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6.12.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서울: 조선일보사, 1997), pp. 310~311.

120)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패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2014), pp. 58~66.

을 소유하나 일할 수도 있는 자”로 정의하는데(〈표 2〉) 현재 북한 ‘돈주’의 행태는 이러한 라이트의 소고용주 정의에 거의 부합한다.

시장에서 화폐를 축적한 개인인 ‘돈주’<sup>121)</sup>가 계획경제 부문을 잠식하거나 직접 고용을 통해 화폐를 자본화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투자다. 현재 북한의 돈주는 협동농장에 자금이나 비료를 빌려준 대가로 농산물을 팔아서 번 돈이나 농산물을 나누고, 공장·기업소에 돈이나 자재를 빌려준 뒤 수익금을 나누고 있다. 다음으로, 명의대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수산사업소에서 어선을 직접 빌리거나 기관명의만 빌리고 직접 선박, 어장, 어업도구 등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이 기관명의를 빌려 광산을 운영하는 경우(이윤의 일정 부분 납부를 조건으로 갹 몇 개를 빌림), 개인이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명의를 대여한 뒤 기계 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고용해 국수, 인조고기(콩깻묵을 원료로 만든 부식물) 등을 생산하는 경우, 개인이 기관명의를 빌려 소매상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이 기관의 자동차를 사적 목적을 위해 대여하거나 개인이 구입한 화물차를 기관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sup>122)</sup> 등이다. 끝으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될 수 없고 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개인기업, 사영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영기업은 대부투자, 명의대여와 달리 국가기관과의 연결고리가 없거나 약하다. 돈주들은 협동농장 이외의 경작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텃밭(개인경작지), 뚝배기밭(개인이 개간한 밭), 부업밭(기관이 개간한 밭) 같은 소토지 경작에 투자하거나 직접 소토지 경작에 나서고 있다. 돈주가 직접 소토지 경작에 나서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도 이루어진다. 이 밖에 소토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사실상 사적 기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광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명의대여식 광산이 아니라 아예 감독자, 노동자 등을 고용해 사굴(私窟)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123)</sup>

생산수단의 ‘사실상의 사유화’뿐 아니라 주택 역시 ‘사실상의 사유화’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이다. 과거 북한에서는 개인살림집<sup>124)</sup> 외에는 주택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경제난과 시장화 이후에는 엄연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불법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북한에서 주택공급은 배정이 원칙으로 주민은 국가 소유 주택의 이용허가증(이하 입사증)을 받아야만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장사 밀착 확보, 장사 실패, 식량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주민이 각급 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과’나 연합기업소의 ‘주택과’처럼 입사증 발급 권한을 가진 부서의 간부들, 전문 부동산 중개인<sup>125)</sup> 등을 통해 ‘비

121) 한 북한인 증언에 따르면, 2007년 당시 돈주의 재산 규모는 적게는 5,000~1만 달러, 많게는 3만~5만 달러 정도였다.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2013), p. 194.

122) 이렇게 등록된 차량들은 개인 돈벌이를 위해 유료 운송·여객 서비스에 투입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찌비차’라고 부른다.

123)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pp. 63~76.

124) 개인살림집이란 1958년 사회주의 제도 수립 이전에 세워진 집으로 국가가 몰수하지 않고 개인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어 내려온, 혹은 그 이후 개축된 주택을 말한다.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p. 293.

125)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전문 부동산 중개인은 완력이 세고 입사증을 인맥과 뇌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며, 현재 집 거간 수수료는 거의 10%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합법적인 주택사용권 매매'를 하고 있다. 2014년도 평양의 최고 주택거래가격은 10만 달러에 달하고, 신의주처럼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한 도시의 주택가격이 다른 도시에 비해 높으며, 같은 도시 안에서는 유통(시장)과 운송(역전)이 편리한 곳일수록 비싼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돈주들은 경제난 이후 발생한 빈집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활발히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sup>126)</sup>

한편,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개인, 협동농장, 공장·기업소의 화폐수요가 늘어나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私)금융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화폐의 산업자본화와 함께 금융자본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 북한 당국은 농민을 제외한 일반 주민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은행을 통하지 않는 개인 간 자금 거래도 금지했었다. 그러다 경제난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사금융 활동이 늘어나자, 2007년 3월 민법 개정을 통해 이자를 받지 않는 개인 간 금전·물건 거래(꾸기 계약)를 합법화시키기는 했다. 하지만, 법규와 달리 개인 간 금융거래에서 고리대가 성행했고,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결국 2007년 10월 형법에 '고리대죄'를 신설했다. 고리대는 불허하지만 이자는 합법화 한 것이다. 사금융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사채업자(돈주)에 의한 고리대금업으로, 돈주들은 장사 밑천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0~20% 수준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며,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완력을 이용해 집, 가전제품 등을 빼앗는다고 한다. 돈주들은 개인뿐 아니라 협동농장이나 기업소에도 돈을 꾸어주고 월 20~30%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돈주들이 국가기관을 끼고 아파트 건설과 매매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표 11>).<sup>127)</sup>

<표 11> 아파트 신축 시 돈주의 투자역할

구분	건설 주체	
	국가기관(건설주)	개인 돈주(투자자)
건설허가 및 설계문건	담당 기관 기업소	뇌물, 음주 접대
주요 자재	계획 분 시멘트, 강재, 목재 일부	시멘트, 강재, 목재 시장을 통해 구입
전기 (동력)	국가계획에 의한 전기보장	정전 시 배전부 로비 제공
주요설비	국가 소유 크레인, 굴착기, 대형수송수단 확보	개인트럭 보장
인력보장	담당기관기업소 행정 및 기술인력 제공	시장 기능인력, 일반 인력 채용
준공검사	담당한 건설주 기관기업소	준공검사요원들에 대한 로비 비용 지원
입사증 (아파트 입주허가증)	입사증 승인문건 제출서류 준비, 해당기관에 제출	입사증 발급 승인에 필요한 로비 달러 지불
단속 처리		불법신축 시공규정 위반, 인력 단속 시 뇌물 제공

※ 출처 :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15), pp. 379~380.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p. 308.

126)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127)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이처럼 소고용주 등장으로 북한의 오랜 계급구조가 바뀌는 동시에, 직업별 인구 구성으로 보나, 사회적 조건으로 보나 북한에서 소자산가 의식 성장도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1993년 말 이후 15년을 거치면서 북한 전체 직업별 인구에서 노동자 비율은 줄고, 사무원, 농장원 비율은 늘어났다(〈표 5〉, 〈표 12〉). 이러한 결과는 경제난이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계급적으로는 북한사회에서 소자산가 의식이 과거에 비해 더 널리 퍼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시장화는 소고용주(돈주) 등장과 성장의 토대인 동시에, 농민의 소자산가(petty bourgeoisie) 의식을 공고하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은 농업 생산·분배 단위를 거의 가족 수준의 소규모 단위로 축소하는 포전담당제 실시, 공식적인 “개인축산” 발전 독려<sup>128)</sup> 같은 최근 농업 정책의 영향을 받아 갈수록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표 12〉 2008년 말 현재 북한의 직업별 인구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자	여자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인력 비중
노동자	5,472,307	3,028,202	2,444,105	57.6	44.66
사무원	1,350,563	887,576	462,987	14.2	34.28
농장원	2,677,022	1,082,309	1,594,713	28.2	59.57
합계	9,499,892	4,998,087	4,501,805	100	47.39

\* 노동자는 국영기업소들과 국가기관들에서 기능노동 혹은 일반노동을 하는 성원, 사무원은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소들과 국가기관들에서 주로 정신노동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직위에 있는 성원, 농장원은 국영농장 혹은 협동농장들에서 농업로동자로 일하는 성원들을 말함.

\* 출처 : 중앙통계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체조사 전국보고서』(평양: 중앙통계국, 2009), 표 11 참조해 필자 정리.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 관료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시장이 당·국가 입장에서 새로운 재정원천, 착취기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관료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시장을 사적 이익 획득의 토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에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11명 모두 비당원이었고, 2012년에는 15명이 모두 비당원이었다. 조선노동당 당원은 시장에 직접 진입하지는 않는 셈이다. 대신 북한 관료는 무역이나 외화벌이 사업, 수입된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허가권을 행사하고, 또는 단속과 검열 권한을 이용해 묵인하거나 봐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sup>129)</sup> 물론 이 과정에서 갈등 양상도 나타나지만, 시장화로 인한 갈등은 관료와 신흥자본가 사이보다는, 내각과 당, 당과 군부 등 관료집단 내부에

128) “풀먹는집집승기르기를 균중적운동으로 벌리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키며 어디서나 축산열풍이 일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129)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p. 187, pp. 199~202.

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신흥자본가들은 방대한 국가기관들 사이에 드러난 갈등의 틈을 이용하고 있다.<sup>130)</sup> 곧, 관료와 돈주는 관료계급 내부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하고 비영속적인 후견-피후견(patron-clients)’ 관계 속에서 시장화 확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sup>131)</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서 신흥자본가가 등장하자 이들이 북한체제 전환, 북한 자본주의화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따라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틈손이 잘 지적했듯이 이론적으로 어떤 집단에게 주어진 계급의식 또는 선형적 계급의식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험적으로도 현재 북한에서 관료와 돈주의 ‘후견-피후견’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상황, 북한에서 시장이 시·군·구역 단위별로 단절된 형태로 운영되면서 시장에서 정치적 비판의식이 촉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sup>132)</sup>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서 갖 등장한 소고용주가 향후 체제전환의 주역이 될지, 아니면 조선노동당 지배체제 안정화에 오히려 도움이 될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봉건시대에 자본가계급은 봉건제 생산방식을 자본가 성장의 질곡으로 바라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했지만, 북한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돈주들은 아직까지는 현행 생산방식(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오히려 성장의 조건 또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편이다. 현재 조선노동당의 농업정책이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농민의 정치적 보수화도 예측해볼 수 있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당·국가의 신흥자본가에 대한 통제력은 약해지고, 신흥자본가의 사회적 영향력은 확대되면서 이들이 근본적 체제전환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량 생산 부담을 떠안고 있으면서, 소규모 영농을 경험한 농민들이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며 소극적·적극적 저항에 나설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

요컨대, 경제난과 시장화 속에서 북한의 계급구조와 계급의식은 변화하고 있고, 북한 앞에 정해진 미래는 없다는 게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다.

## V. 맺음말

과거 사회주의 정당들의 계급이론은 사회주의 사회의 실상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도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 역시 과거 북한의 실제와 거의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은 착취계급이 사라진 북한에서 혁명적·선진적인 노동계급이 소자산가 의식이 강한 농민, 자유부동하는 인텔리를 잘 지도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집단주의적으로 개조해가다보면, 그리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국가적) 소유로 바꿔내면 마침내

130)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pp. 200~201.

131)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2013), pp. 58~60.

132) 김병로,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계급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인민대중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착취계급으로 군림해왔고,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혁명적·선진적 노동계급이라는 신화는 무너진 채 군인이 노동계급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식량의 은닉과 밀매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농민 혁명화에도 완전히 실패했다. 오직 인텔리만이 조선노동당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북한의 인텔리가 ‘노동계급의 인텔리’라는 조선노동당의 공식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인텔리 역시 조선노동당이 충성을 강요하던 인민대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 계급이론과 실제 북한 계급구조·계급의식의 괴리는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관료, 노동계급, 농민이라는 3대 계급 사이에서 소고용주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함으로써 자본가계급 소멸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또한 관료와 소고용주가 후견-피후견 관계를 맺으면서 관료의 착취계급적 속성이 더 강해지고 있고, 시장화 진전, 조선노동당 농업개혁 등의 영향으로 농민의 소자산가 의식은 갈수록 공고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요약되는 북한 계급 연구가 앞으로 통일교육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첫째, 오늘날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이해 교육은 북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부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계급은 단순히 경제적 관계만을 반영한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관계, 정치적 관계 등을 포함해 서로 영향을 끼치는 사회 안의 모든 관계가 반영된 개념이므로, 조선노동당의 계급이론, 북한의 계급관계사, 북한 계급구조·계급의식의 현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결국 교육 참여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데올로기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사회의 총체적·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둘째, 북한 계급 연구는 지금보다 좀 더 보편적인 견지에서 북한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성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정치적 계층이 과거 북한 인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던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sup>133)</sup> 그런데 계급의 눈으로 보면, 성분 또한 억압적·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지배이데올로기처럼 착취계급인 관료가 피착취계급인 인민대중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성분도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따라서 계급관계가 변하면 성분의 사회적 영향력도 변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성분의 사회적 영향력이 시장화 이후에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는 조짐이 엿보인다.<sup>134)</sup> 후견-피후견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와 돈주 사이에서도 성분은 과거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리하면, 북한에서 시장화에 따른 계급관계 변화는 성분의 사회적 영향력을

133) 조선노동당의 성분 분류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래 책과 글 참조.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3); 김재용, “북한의 계급정책과 계급위계구조의 형성(1945~1950),” 『역사와 현실』, 제85호 (2012);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8); 정일영, “한국전쟁 전후 북한사회계층의 변화 연구(1945~1961),”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2015).

134)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pp. 195~198.

잠식해 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현상이 자주 관찰될수록 북한 변화를 좀 더 보편적인 견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북한 계급 연구, 북한 계급 교육도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요즘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과학적·객관적으로 대답하려면 북한이라는 빙산의 수면 윗부분에 해당하는 지배집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북한이라는 빙산은 수면 윗부분이 온전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빙산의 수면 아랫부분은 수면 윗부분이 흘러갈 방향을 100% 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해왔고, 앞으로도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빙산의 수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역동적 관계는 계급 분석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북한 계급 연구는 통일교육 현장에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주관적 기대와 바람(wishful thinking)만으로 대답하는 오류를 예방해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덕서. 『새 인간 형성과 천리마작업반운동』.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 강수택.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서울: 삼인, 2001.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3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서울: 창비, 2013.
- 극동문제연구소 편. 『원전 공산주의대계: 이론과 비판 (상)』.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4.
-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서울: 선인, 2003.
- 김귀옥·김채운. “변혁기 북한의 계급과 계급정책.” 김채운·장경섭 편. 『변혁기 사회주의와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공산권연구실 편. 『북한공산화 과정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72.
-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8.
- \_\_\_\_\_.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 \_\_\_\_\_.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권 1호, 2013.
- 김성보. “해방 초기 북한에서의 양곡유통정책과 농민.” 『동방학지』, 77~79 합집호, 1993.
- \_\_\_\_\_.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_\_\_\_\_. 『북한의 역사 1』. 서울: 역사비평사, 2011.
- 김연철. “1950년대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자.”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1998.
- 김재웅.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현실』, 제56호, 2005.
- \_\_\_\_\_. “북한의 계급정책과 계급위계구조의 형성(1945~1950).” 『역사와 현실』, 제85호, 2012.
- 김진환.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 서술.” 정영철 외. 『조선로동당의 역사학: 조선로동당사 비교연구』. 서울: 선인, 2008.
- \_\_\_\_\_. “북한현대사: 자주와 자립을 향한 지난한 행로.” 강정구 외.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서울: 선인, 2009.
- \_\_\_\_\_. “북한 정치·경제구조의 형성과 특징.” 강정구 외.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서울: 선인, 2009.
- \_\_\_\_\_.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내면화.” 강정구 외.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서울: 선인, 2009.
- \_\_\_\_\_. 『북한위기론: 신화와 냉소를 넘어』. 서울: 선인, 2010.
- \_\_\_\_\_.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 김영수. “「주체의 인테리론」: 이론과 실제.” 『동아연구』, 제29집, 1995.
-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1945.8.20).”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1955.4.1).”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61.9.11).”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한 테제(1964.2.25).”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5.7.1).” 『김일성 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농민을 혁명화하며 농업부문에서 당대표사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1967.2.2).” 『김일성 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인도학계인사들과 한 담화(1983.6.12).” 『김일성 저작집 3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련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1985.11.19).”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8일.
-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75.7.1).”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1.3.8).” 『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9.11.27).” 『김정일 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1990.9.20).”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2.12.21).”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6.12.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서울: 조선일보사, 1997.
- \_\_\_\_\_.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1997.3.17).”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노용환. “북한의 인구센서스결과 분석.” 『보건복지포럼』 1997년 4월.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4.
- \_\_\_\_\_.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_\_\_\_\_. 『우리 당의 선군정치(증보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용어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서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04.
- \_\_\_\_\_. “북한 재정제도의 최근 변화 평가.” 『통일경제』 2009년 봄호.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9.
- 박재환. “일상생활 사회학의 이론적 전통.” 박재환 외.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 비판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15권 1호, 2012.
- \_\_\_\_\_. “북한정부는 시장화를 관리할 수 있는가.”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 \_\_\_\_\_. “북한 시장화 논의의 지형과 담론.” 『북한의 권력과 사회동학』. 북한연구학회 2014년 하계학술회의 (2014년 7월 11일).
-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4.
-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2013.
- 이정희. 『동유럽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 이종석. 『북한의 역사 2』. 서울: 역사비평사, 2011.
- 이태섭. 『김일성리더십 연구』. 서울: 들녘, 2001.
-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15.
- 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통일문제연구』, 제51호, 2009.
- 전태국. 『(개정판) 지식사회학: 지배·이데올로기·지식인』.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1997.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전현준 외.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정영철 외. 『조선로동당의 역사학: 조선로동당사 비교연구』. 서울: 선인, 2008.
- 정은미. “북한의 국가중심적 집단농업과 농민 사경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 정일영. “한국전쟁 전후 북한사회계층의 변화 연구(1945~1961).”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20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편.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 경제 발전 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 력사교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조선로동당출판사.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KDI 북한경제리뷰』 제5권 제1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중앙통계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제조사 전국보고서』. 평양: 중앙통계국, 2009.
- 직업동맹출판사. 『천리마기수독본』. 평양: 직업동맹출판사, 1961.
- 차문석. 『반노동의 유포피야: 산업주의에 굴복한 20세기 사회주의』. 평양: 박종철출판사, 2002.
-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공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서울: 한울, 2001.
- 최지영.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서울: 한국은행, 2016.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 통일부.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4.
-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통일원, 1996.
- 고승효 지음. 이태섭 옮김. 『현대북한경제입문』. 서울: 대동, 1993.
- 크리스 하먼 지음. 김형주 옮김.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1945~1983』. 서울: 갈무리, 1994.
- 에드워드 G. 그랩 지음. 양춘·김원동 옮김. 『사회불평등론: 고전 및 현대이론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89.
- E. P 톰슨 지음. 나종일 외 옮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0.
- Wright, Erik Olin. “A Gener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lass Structure.” in Erik Olin Wright and others. *The Debate on Classes*. London·New York: Verso, 1989.
-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김희교 옮김. 『현대중국을 찾아서 2』. 서울: 이산, 1999.
- H. 마르쿠제 지음. 문현병 옮김.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분석』. 서울: 동녘, 2000.
- 루이스 A. 코저 지음. 신용하·박명규 옮김. 『사회사상사』. 서울: 일지사, 1978.
- 레온 트로츠키 지음. 김성훈 옮김. 『배반당한 혁명』. 서울: 갈무리, 1995.
- 로즈매리 크롭프톤 지음. 정태환·한상근 옮김. 『현대의 계급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 스테판 에젤 지음. 신행철 옮김. 『계급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로동신문」, 「연합뉴스」 (온라인), 「통일뉴스」 (온라인)

